

건설동향브리핑

제434호 (2013. 10. 28)

■ 경제 동향

- 9월 수도권 주택 거래, 매매 및 교체 수요 증가

■ 정책 · 경영

- 창조경제형 건설산업 추진 방향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해야

■ 정보 마당

-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기업은 왜 실패하는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9월 수도권 주택 거래, 매매 및 교체 수요 증가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높고, 주거 환경 양호한 지역 중심 -

■ 서울·경기 중심으로 거래량 크게 증가

- 2013년 9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6,73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5% 증가함.
 - 8.28 대책 및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9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81.1%, 지방 19.8% 증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 94.1%, 인천 57.5%, 경기 81.2% 증가하여 서울과 경기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그러나, 예년(2006~12년) 9월 평균 대비로는 서울 26.4%, 인천 29.7%, 경기 14.8% 감소하여 여전히 예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서울 모든 유형, 경기 아파트 중심 거래 증가

- 수도권에서는 모든 주택의 유형에서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였음. 특히, 서울과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 거래량의 증가세를 견인함.
 -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100.2%, 연립주택 58.9%, 다세대주택 48.9%, 단독주택 37.1%, 다가구주택 37.1% 증가
 - 서울은 아파트(114.4%), 다세대주택(78.7%), 연립주택(69.6%) 모두 증가폭이 비교적 큼. 모든 유형의 거래량이 고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경기는 아파트(102.7%)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함. 인천은 다가구주택(153.3%)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나, 거래량의 절대치가 38건에 불과함.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 주택의 유형별 거래량 변동률(2013년 9월)>

(단위 : %)

구분	전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수도권	81.1	100.2	58.9	48.9	37.1	37.1
서울	94.1	114.4	69.6	78.7	54.2	51.4
인천	57.5	70.4	33.3	30.7	33.9	153.3
경기	81.2	102.7	57.5	32.5	23.7	19.3

자료 : 국토교통부

■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 높은 지역 중심 거래 증가

-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중소형(85㎡ 이하) 중심, 경기도는 중대형(60㎡ 이상)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함.
 -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소형(60㎡ 이하) 102.2%, 중형(60~85㎡ 이하) 107.8%, 대형(85㎡ 초과) 79.6% 증가함.
 - 서울 : 소형 127.4%, 중형 121.4%, 대형 72.8% 증가
 - 경기 : 소형 98.4%, 중형 101.5%, 대형 118.7% 증가
 - 인천 : 소형 81.6%, 중형 112.0%, 대형 4.1% 증가
-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은 주거 환경 및 교통 인프라가 안정화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서울의 외곽 지역과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에서는 구로구(221.8%), 금천구(190.7%), 동작구(187.2%), 강북구(176.3%) 순임.
 - 경기에서는 용인시 수지구(277.6%), 광명시(215.7%), 안양시 만안구(215.4%), 수원시 장안구(202.4%), 고양시 덕양구(188.7%) 순임.
 - 이들 지역은 서울 외곽 지역이거나 서울 인근의 경기도 권역으로 주거 환경 및 고용 중심지와의 교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임.
 - 또한, 대부분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65%를 넘어서는 지역임. 특히, 소형의 경우에는 70%를 상회하는 지역도 존재함.

■ 거래시장 변화 징후 나타나,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

- 8.28 대책 이후 거래시장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주택 정책의 불확실성이 거래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전세 수요의 매매 이동 및 교체, 투자 수요의 증가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서울의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의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안) 적용 시점의 논란 등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의 처리 시기 및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창조경제형 건설산업 추진 방향¹⁾

- 규제 개선과 창의적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 창조경제,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성장 기초

- 국민 창의성과 과학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간 및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
 - 이를 통해 개도국형 외연 성장 구조에서 선진국형 선도 내연 구조로 전환하고자 함.

■ 건설산업, 창조경제와 경제 민주화 영역 사이에서 창조경제 산업군으로 자리잡지 못해

- 현재 건설산업은 위기 탈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로,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건설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각종 전략, 건설산업에서 기존에 고민하던 분야와 동일

- 시장, 기술, 인재 양성,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규제 개선 등 세부 영역별 개선·혁신 방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음.
 - 창조경제는 건설산업에 대해 혁신과 개선보다 달성 방법과 주체의 변화를 강조
- 즉, 산업, 기술, 사업, 조직 간 진정한 융합의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정부 재정 부족 및 투자 우선 순위의 변화로 건설산업은 앞으로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즉, 민간 주도형 내·외수 시장 선도 융합형 사업, 상품, 기술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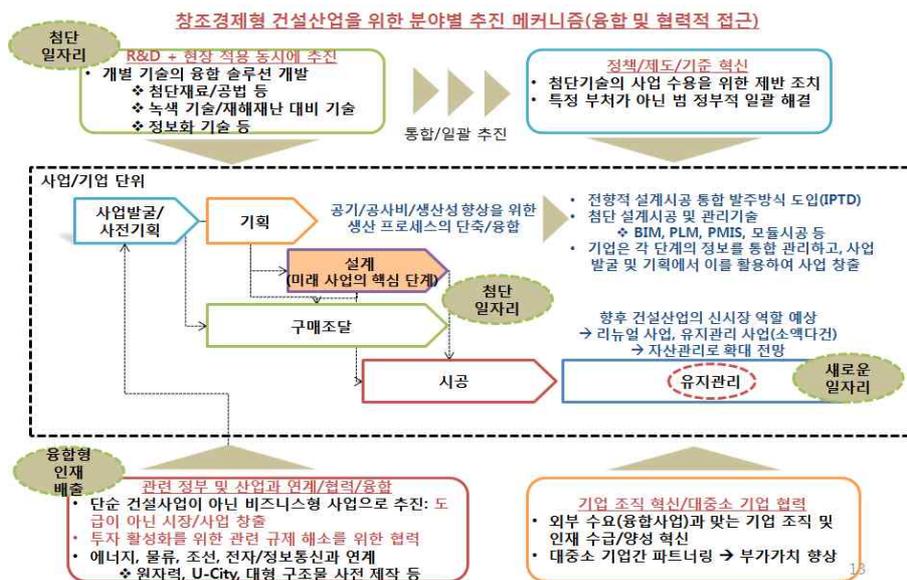
■ 시장, 사업, 기술, 기업, 정책/제도 등 주요 영역에서의 전향적인 변화 필요

- 시장 : 해외는 타 산업 간 융합을, 국내는 규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월 28일에 개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산업 추진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된 첫 번째 주제인 '미래 지향형 건설산업을 위한 융합 분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전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해외 시장 : 국내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산업을 넘어선 구상이 필요함. 또한, 중견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모델 개발 필요
- 국내 시장 : 제도 기반 성장 구조에서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투자 유인을 위한 각종 규제의 폐지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시장을 창출해야 함.
- 사업 및 기업 : 기획~유지 관리 등 생애주기 프로세스의 통합을 위한 발주 방식의 혁신과 정보화·자동화가 가속화되어야 함. 또한, 외부 수요(투자·개발 사업, 프로세스 통합)에 맞는 기업 조직의 변화, 기술과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필요
- 기술 : 연구 개발(R&D) 결과의 현장 적용을 단축하고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함. 대형 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요구됨.
- 정책·제도 : 각종 융합과 첨단 기술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함. 또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생산 구조를 구축해야 함.

<창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분야별 추진 메커니즘>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범정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 단순 건설 물량의 확대가 아닌 비즈니스형 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cerik.re.kr)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해야¹⁾

- 중소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기구 설립 검토 필요 -

■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고용 창출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 한국 경제는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과거형 성장 전략으로부터,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건설산업, 고용 창출 능력 양호한 대표적 창조산업으로 적극 참여 요구돼

- 79개 창조 산업 분야 중 16개의 건설산업 분야가 포함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²⁾
- 건설산업은 삶의 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 분야 간 기술 융·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건설산업은 그동안 많은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영역이 산적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
 - 건설 분야는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
 - 생산 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설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 노령화 등에 대비 등

■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 능력이 우수해 창조경제 구현에 적합

- 최근 건설산업 분야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 모듈 공법 등 생산 방식의 혁신, IT·GT 등 융·복합 기술의 심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건설산업 분야의 혁신은 1980년대 중반에 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10배 이상 증가
 - 호황 국면보다는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불황기에 더욱 활발한 경향을 보임.
- 건설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13.7명/10억원으로 제조업 평균(9.3명)과 비교해 47.3%나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월 28일 개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산업 추진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된 두 번째 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전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2) 강성진,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4.

높고,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해도 6.2%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양호

- 중소기업은 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의 99%, 고용의 55%, 부가가치의 37%를 담당할 정도로 건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위기의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매우 미흡

- 외환 위기 이후 중소기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2%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으나, 연간 퇴출되는 업체가 22.1%에 이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
- 대부분의 중소기업지원제도는 건설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전체의 0.2%에 불과
 -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 107개 중에서 건설산업 지원 대상은 4개에 불과
 - 자금·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건설산업은 건강 진단 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 불가
 - 특히,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의 경우, 건설산업은 제외 업종으로 지정돼 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연간 90억원으로 정부 부처 지원 예산의 0.2%에 불과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는 발주/하도급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적 보호 조치에 주력하는 양상
 - 업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제로섬 게임 양상이 고착화되고, 기업가 정신의 훼손 등으로 창조경제 관점에서 재고 필요

■ 중소기업체들의 적극 동참을 위해선 관련 지원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선 절실

-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에 건설업체도 지원 허용
 - 중소기업 건강 진단 및 정책 자금 지원 등에 대한 건설산업 차별적 조치 시정 필요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제도 확대
-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가칭 ‘중소건설업지원센터’ 설립 검토
 - 경쟁 제한적 보호 대신 중소기업체의 합리적 경영 및 기술 혁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전문 기구의 설립 필요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년 10월 31일부로 시행 -

■ 공공 데이터란?

- 공공 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의미함.
 - 이것은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전자 문서, 데이터 베이스 등 매체의 유형과 종류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임.
 - 예를 들어, 서울시설공단 교통 및 시설물 관련 데이터,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특허청의 특허 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리 데이터 등이 공공 데이터에 포함됨.

■ 수동적 공개에서 능동적 공개로 변화, 데이터의 종류는 점차 확대

- 2013년 7월 30일,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데이터법」)이 제정되어 10월 31일부터 시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안보, 국민 생명 및 신체, 사생활 보호 등의 경우를 제외한 공공 데이터 의무 공개
 - 제공되는 데이터는 공공 정책, 법률, 정치, 국토 관리(도시 계획, 건설 정보, 공공 건축, 국토지리정보, 부동산·주택), 환경, 재해·안전 등이 있음.
 - 공공 데이터 개방의 창구는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였으며, 정부가 공개한 모든 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국민의 요청에 따른 수동적 정보 공개에서 능동적 정보 공개로의 변화
 - 2008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친 후 데이터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음.
 - 반면, 「공공 데이터법」은 정부가 먼저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능동적인 방식을 취함.
 - 법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 데

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음.

- 2013년 6월까지 약 2,260종인 공공 데이터 개방 건수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

■ 국외 공공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현황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추세임.
 - 미국은 2009년 공개 정부 추진안(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마련하였고, 연방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data.gov)를 구축해 운영
 - EU는 EU 기구와 27개 회원국이 보유한 모든 공공 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데이터 개방 전략의 수립 후 ‘공공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 추진
 - 일본은 2010년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전략’에서 행정 정보의 공개와 제공,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등 공공 정보의 활용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하고,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이트(openlabs.go.jp)를 개설해 운영
- 공개된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신규 산업 활성화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유도
 - 각국의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공공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며,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공 데이터와 건설산업

- 공공 데이터는 국가 인프라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이는 다시 말해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
 - 일례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의 도로 시설물 데이터(data.seoul.go.kr)를 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도로 시설물의 위치와 종류, 구조물 등급, 준공일, 일반 제원, 관리 주체, 설계회사 등이 공개되어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설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건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정책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강상혁(연구위원 · shkang@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0. 1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R&D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주택 분야 R&D 기본계획 수립 자문
10. 18	아시아투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건설대상 심의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녹색 건축 및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건설대상 심의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8.28 대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0. 22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 주최, ‘EWS 지표 점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9월 주요 지표 점검
10. 23	한국주택금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주택 금융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10. 24	성남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방안
10. 25	건설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셈 공사비 산정 기준 심의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참여 - 표준품셈 심의

■ 연구원, ‘201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3. 11. 6(수) 14:00~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문 의 : 기획지원팀(02-3441-0883, 0896), 선착순 입장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정책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본고는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장비업자·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범위반사실공표제도를 제시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란 「행정법」 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 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임. - 범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기업은 왜 실패하는가

기업 실패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가설이 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 짐 콜린스는 기업 실패의 이유를 주로 기업의 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동태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를 몰락의 5단계라 부른다.

제1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이다. 성공은 일시적이고 운이 따라야 하는데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은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제2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이다. 사업 규모 확대와 양호한 사업 성과가 이어지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탐욕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제3단계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이다. 긍정적인 징조는 확대하고 부정적인 징조는 축소하면서 실증적인 증거 없이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크게 투자하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이다. 과감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전략, 급격한 전환, 드라마틱한 변혁, 판을 뒤집을 합병,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할 묘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에서 구원해줄 구원투수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 제5단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이다. 적자가 누적되고 더 이상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짐 콜린스의 기업 몰락의 5단계는 위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반드시 위대한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스토리가 아니다. 한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기업들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같은 이유로 한 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건설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지금 위기에 처한 건설기업이라면 짐 콜린스의 이 가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실패를 유도하는 외적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성공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를 챙기고 다독거리며 전진하는 일 뿐이다. 그것은 짐 콜린스가 그의 위대한 저서 「Good to Great」에서 강조한 겸손과 도전 의식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경제, 2013. 9. 23>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